

2003. 1. 17

세계 WMD 문제의 현황과 대책

1. WMD의 새로운 정의(定義)와 범위
2. WMD의 최근 추세와 핵심문제
3. WMD 문제의 국제적 대책
4. 한국의 고려사항

요 약

대량살상무기(WMD)는 최근 세계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시에 전통적인 핵·생물·화학무기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파생무기가 출현하는 등, 개념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생물무기는 현대 유전공학의 발달에 따라 무기종류의 증가는 물론 지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WMD를 운반·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도 사정거리 1,000~3,000km 범위의 중거리 미사일을 중심으로 확산의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음.

WMD의 핵심문제는 테러집단에 의한 WMD 사용 가능성과 비확산 규범의 와해 등을 포함하며, 한국은 세계적 차원 및 한반도에서의 WMD 개념 확대 등 국제동향을 반영한 정책수립과 일반국민에 대한 WMD의 심각성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한 계도가 필요함.

1. WMD의 새로운 정의(定義)와 범위

- 대량살상(또는 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는 일반적으로 인명살상 및 시설 파괴의 방법과 규모 등에 있어 재래식 무기와 확연히 구별되는 핵·생물·화학무기를 포함한 3대 무기체계를 지칭하는 집합적 용어이나 최근 9·11 테러사태 이후 보다 포괄적으로 새롭게 정의(定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무기종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가. 핵무기(nuclear weapons)

- (1) 핵물질(U^{235} 및 Pu^{239})을 폭발에 의해 분열 또는 분열 및 융합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대규모 폭풍 및 고열과 방사능을 방출하는 무기로써 인명살상 위력이 엄청나게 큼에 따라(핵무기 1개로 10만 명 이상 살상가능) 대량 살상무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음.
 - (2) 최근에는 전통적인 핵무기 이외에도 핵발전소의 폐연료봉 또는 X-레이 촬영 및 기타 의료기 등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다이내마이트 등 재래식 폭약에 의해 터뜨림으로써 방사능을 살포시키는 이른바 「방사선 무기」(radiological weapon)도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로 부각되고 있음.
- 9·11테러사태 이후 미군에 의한 아프가니스탄의 알 카에다 근거지 수색에서 발견된 이른바 「더러운 폭탄」(dirty bomb)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무기로서 핵무기만큼 위력적이지는 않으나 방사능 오염을 통한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는 새로운 유형의 무기로 간주되고 있음.

- (3) 현재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한 국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인도·파키스탄 등이며, 이스라엘·이란·이라크·북한 등 4개국은 핵무기를 보유 또는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나. 생물무기(biological weapons)

- (1) 생물무기는 인명살상을 위해 병원체와 같은 생물조직체(living organisms) 및 독소를 이용하는 무기로서 현재 이 세상에서 생물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병원체 및 독소는 약 40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 대량살상무기 중 생물무기는 테러행위에 가장 간편히 이용될 수 있어 최근 「생(生) 테러리즘」(bioterrorism)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9·11 테러사태 직후 미국에서 발생한 우편배달에 의한 탄저균(anthrax) 살포 파동은 생물무기에 의한 테러리즘 실례를 보여주고 있음.
- (3) 생물무기 보유 의혹국은 크게 실제 생산국(이라크·이란·러시아), 생물무기 프로그램 보유국(이스라엘·북한·중국), 생물무기연구 프로그램 보유 의혹국(이집트·시리아·리비아·인도·파키스탄·수단) 등으로 분류되고 있음.

다. 화학무기(chemical weapons)

- (1) 화학무기는 독성물질(toxic properties)에 의한 인명살상과 신체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무기로서 생산비용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고 제조가 용이하여 「가난한 자의 핵폭탄」으로 불리고 있음.
- (2) 1997년 화학무기금지협정(CWC)의 발효로 인해 화학무기 보유분의

폐기 및 생산금지가 결정되었으나, 이라크·북한·이스라엘·시리아·리비아·이집트 등은 현재까지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상당량의 화학무기 및 연구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러시아·중국·인도·이란 등은 협정에 가입, 화학무기 및 연구프로그램 보유를 인정하고 폐기를 약속했으나 실제 이행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라.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s)

- (1) 무기 자체는 아니나 대량살상무기의 발사 및 운반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미사일—특히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s)도 일반적으로 WMD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음.
- (2)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를 기준으로 크게 단거리 미사일(short-range missiles, 사정거리 1,000km 이하), 중거리 미사일(medium-range missiles · 사정거리 1,000~3,000km), 중·장거리 미사일(intermediate-range missiles · 사정거리 3,000~5,500km),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ICBM, 사정거리 5,500km 이상) 등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 단거리 미사일은 이집트·타이완 등 세계 전지역에 걸쳐 24개국이 보유하고 있으며 중거리 미사일은 중국·북한·인도·파키스탄·이란·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이, 중·장거리 미사일은 중국이, 그리고 장거리 대륙간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자 핵보유국인 미국·러시아 등 P-5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3) 최근에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상당 거리(약 2,000km 이상)를 저공으로 비행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기능을 가진 무인항공기(UAVs: Unmanned

Aerial Vehicles) 및 무인 전투항공기(UCAVs: Unmanned Combat Aerial Vehicles) 등도 WMD의 운반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량살상무기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마. 재래식 대량살상무기(conventional WMD)

(1) 전통적으로 WMD는 흔히 ABC(atomic, biological and chemical)무기로 통칭되는 핵·생물·화학무기를 일컫고 있으나, 재래식 무기에 의하더라도 비행기에 의한 미국 세계무역센터 충돌과 같은 9·11테러사태의 실례가 보여주듯이 인구밀집지역 혹은 산업집중 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 대규모 인명살상과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공격방식도 대량살상무기의 범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고층사무실 빌딩·원자로·화학산업시설 등에 대한 테러리스트 집단의 공격은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9·11테러사태 이후 WMD의 정의(定義) 및 범위가 새롭게 확대되는 추세가 인지되고 있음(최근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피해규모 및 결과를 기준으로 WMD를 정의할 것을 제시한 바 있음).

(2) 과거 1980년대 인도 보팔에서의 화학공장 폭발, 구 소련지역에서의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참사 등은 사고 또는 재래식 방법에 의한 산업시설 공격 및 테러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어느 때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임.

2. WMD의 최근 추세와 핵심문제

가. WMD의 최근 추세

(1) 무기보유국의 세계적 확산

- 과거 냉전시대 중 WMD는 미국·러시아 등 주로 강대국에 의해 보유되었으나, 냉전종식 이후 최근의 추세는 강대국 범위를 넘어 후진국·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더 많은 국가들이 WMD 보유를 추구, 세계 전 지역으로 번식·확산(propagation) 되고 있음.
- 국제사회의 WMD 보유는 1960~80년대에 양적(量的)으로 최고치를 이룬 후, 냉전종식이후 감소되었으나 소수 강대국 범위를 넘어 더 많은 국가(특히 중동 및 서남아·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확산되고 있음.
- 냉전종식 이후 세계의 WMD 보유량은 양적으로는 감소되었으나 질적인 성능 개선과 함께 세계 전지역으로 확산추세를 보임에 따라 1992. 1 유엔 안보리는 “WMD의 지리적 확산이 국제 평화·안보의 최대 위협요인”이라고 선언한 바 있음.

(2) 생물무기의 급속한 발달 및 확산

- WMD중 생물무기가 최근 유전자 조작기술 발전과 배양기술 발달 등 생명공학 산업의 진전 및 확장에 힘입어 이용가능 무기종류의 증대를 포함,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과학자들에 의하면 “물리학이 20세기의 무기분야를 지배했다면, 21세기는 생물학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생명공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곧 생물무기의 발달 및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현재 전세계에 존재하는 생명공학 연구관련 산업기관은 약 3천 개 (미국 1,270개, 유럽 1,570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의 생명공학 연구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파급되고 있음.
- 생물무기 자체의 경우, 미국은 1969년 닉슨 대통령에 의해 공격목적의 생물 무기생산을 중단했으나, 러시아는 1992년 생물무기연구기관의 공식적인 폐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거대한 생물무기연구 및 생산시설(bio-defense establishment)을 가동해 왔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의 관련 정보 및 기술 누출과 생명공학 연구의 발달로 생물무기 확산의 바탕이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3) 새로운 파생무기의 출현

- 기존의 핵·생물·화학무기 등 전통적인 대량살상무기의 원리와 파괴력을 이용하는 「파생적 무기」(派生的 武器)도 새롭게 출현, WMD의 범주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앞서 지적된 「더러운 폭탄 과 같은 방사선 무기도 핵무기의 파생적 무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기존 WMD의 원리와 위력을 이용하는 파생무기는 계속 출현할 수 있음.
- WMD의 원리와 파괴력을 이용하는 새로운 파생무기의 출현으로 WMD는 여러 가지 분리된 위협(separate threats)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이들 중 어떤 위협들은 포착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대응하기도 어려울 수 있음.

(4) 중거리 미사일 개발추구와 확산

- WMD의 발사·운반수단이 되는 미사일의 경우, 기술적으로 어려운 장거리 대륙간 미사일보다는 위협능력을 보유하면서 보다 개발이 용

이한 사정거리 1,000~3,000km 범위의 중거리 탄도미사일(medium-range ballistic missiles: MRBM)이 중점적으로 추구하고 있음.

- 중거리 미사일의 대표적 사례는 스커드 미사일을 기초로 북한이 개발한 노동 및 대포동 I 미사일(사정거리 1,320km 이상), 이란의 Shahab III(1,300km), 이스라엘의 Jericho II(1,500km), 인도의 Agni II(2,000km) 및 Agni III(3,500km), 파키스탄의 Ghauri(1,300km) 및 Ghauri II(2,000km) 등이 꼽히고 있음.
- 중거리 미사일의 확산에 비해 미·러 등 강대국이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대륙간 미사일(ICBM)은 관련국간 협정에 의해 감축추세에 있으며, 1980년대 미·소간 협정에 의해 폐기된 중·장거리 미사일(intermediate-range missiles)은 최근 중국에 의해 개발이 추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나. WMD의 핵심문제

(1) 테러집단에 의한 WMD사용 가능성

- WMD의 발달 및 세계적 확산과 관련, 9·11테러사태 이후 가장 우려되는 국제안보 문제는 테러집단 또는 비정부 조직(subnational group 및 non-state actors)에 의한 WMD사용 가능성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영국의 권위지 *Financial Times* 신문은 2002. 7. 9 WMD 특집기사에서 안보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종합, “테러집단에 의한 WMD 보유와 사용가능성이 더 이상 상상의 문제가 아니다(no longer unthinkable)”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히 9·11테러사태 이후 WMD를 이용한 테러의 위험성(즉, risk of WMD terrorism)은 국제사회에서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될 수 있음.
- 한편 테러집단 또는 비정부 조직에 의한 WMD 보유는 이들 단체에

의한 직접 제조 또는 생산 방식보다는 이른바 불량국가(rogue states)의 보유무기를 이전·이관받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량국가의 WMD 보유문제가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

- 다시 말해, 테러집단 또는 비정부 조직에 의한 WMD 보유 및 사용은 불량국가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며, 무기사찰 문제를 둘러싼 현재의 이라크 사태는 불량국가의 WMD 확산을 막는 시험대 역할을 하고 있음.

(2) WMD 규제협약의 위반 증대 — 비확산 규범의 와해 위기

- WMD를 규제하는 국제협약(예: 핵무기-NPT, 생물무기-BWC, 화학무기-CWC)이 존재하고 있으나 일부국가가 가입하지 않고 있거나 가입했다 하더라도 협약의 위반 및 비확산 규범의 미준수 사례가 많아 효율적인 WMD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WMD의 또 다른 핵심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 핵무기의 경우, 인도·파키스탄은 NPT에 가입하지 않고 핵실험에 성공했으며, 이라크와 북한은 NPT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또한 생물무기를 규제하는 BWC도 최근 협약준수와 관련된 검증체제를 강화하는데 실패하였으며, 화학무기 규제 목적의 CWC도 일부국가의 협약불이행으로 효율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핵·생·화학무기 등 모든 WMD를 통제하는 국제 군축체제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등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일부 국가에 의한 WMD 규제협약의 위반 및 비확산 규범의 미준수 사례가 증대함에 따라 보수적 시각을 가진 미국의 안보문제 전문가들은 WMD 규제협약이 오히려 이를 성실히 준수하는 국가들의 안보를 저해하고 위반국가들의 공격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 WMD 규제협약의 무용성을 지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 부시 행정부의 외교노선을 지지하는 안보 전문가들은 적절한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재래식 군사력의 증강, 포괄적 방어체제의 구축, 동맹관계의 강화 및 WMD 추구 불량국가의 외교·경제적 고립화 등을 강조하고 있음.

(3) WMD와 미사일 확산의 상호연계

- 국제적으로 WMD와 미사일 문제는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양자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WMD와 미사일의 기술개발과 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
- 즉, 일부 국가들은 WMD 보유추구와 함께 WMD 위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역으로 미사일의 개발은 WMD의 위력을 더욱 파괴적으로 만들고 있음.
- 이른바 불량국 및 우려국으로 알려진 일부 국가들이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 보유 및 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WMD를 발사·운반하기 위한 것이며, WMD 보유가 확실해지거나 늘어날수록 미사일 개발 및 확산도 가속화될 수 있음.

3. WMD 문제의 국제적 대책

- 냉전종식 이후 WMD의 확산은 일부 종교에 기반한 극단주의의 대두와 함께 국제평화와 안보질서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도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국제적 대책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가. 비확산 규범의 강화

(1) WMD의 확산은 근본적으로 일부 국가들이 자국의 열세적 군사력 보완 · 對강대국 협상력 강화 ·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 구축 등의 목표를 위해 이를 규제하는 국제협약 규범의 위반과 불이행으로부터 유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협약 이행 여부의 철저한 검증체제 구축과 성실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제공을 포함한 비확산 규범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체로 냉전시대인 1960~70년대에 채택된 WMD 관련 국제규범(예: NPT 및 BWC)들이 과거와 같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비확산 규범의 보편적 이행과 철저한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mechanism)의 구축여부는 사실상 앞으로 WMD 확산방지를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음.

(2) 이와 관련, 2002. 11. 25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된 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 행동지침」(ICOC: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은 기존의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가 미사일 기술 · 부품 공급국들을 중심으로 한 수출통제지침인 것에 비추어, MTCR 비회원국들을 포용하도록 투명성과 유인조치 도입을 강조한 것임에 따라 향후 WMD 확산 방지를 위한 시범적 사례가 될 수 있음.

- ICOC는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와 같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공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탄도미사일 및 우주발사체 개발 프로그램 정보의 공개, 발사계획 사전 통보의 이행 및 관련 정책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비확산 규범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나. 대응 및 사후 관리 능력의 증대

(1) WMD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규범이 효율적으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이상 테러집단이나 이른바 불량국가들이 이미 WMD를 보유,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전략이 미국을 중심으로 서서히 제기되고 있음.

- 미국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WMD 대응 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to Combat WMD)」을 발표하면서 WMD는 테러집단과 불량국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고 있음”을 전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와 WMD 실제사용에 대한 관리능력의 향상 필요성을 이른바 「대(對)확산 (Counter-proliferation)」의 이름으로 제시하고 있음.

(2) 이러한 「대(對) 확산」 전략은 과거 냉전시대를 관리하던 WMD 규제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등에 대한 실망감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서 세부적으로 WMD의 장비 및 기술의 국제적 이동을 저지할 수 있는 개입수단과 효율적인 억지력의 개발 및 확보 등도 포함되어 있어 국제사회의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비확산 규범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작금의 국제 현실에서는 필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전략의 하나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다. 국제협력의 강화

(1) WMD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국간 정보교환, 수출통제에 관한 정책공조 등 국제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눈에 띄지 않는 WMD 관련기술·정보의 확산방지가 WMD 원료 및 재료의 확산방지 보다 더 어려운 점을 감안, 「제조기술 및

방법의 확산 (proliferation of know-how) 방지를 위한 인적자원 (brain power)의 이동통제에 대해서 보다 높은 국제적 관심과 정부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2) 이와 함께 WMD확산의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있는 일부 국가 정권의 권위주의적 독재화와 후진국의 빈곤문제, 세계화 과정에서의 소외현상 및 고립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경제협력도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4. 한국의 고려사항

가. WMD개념 확대 등 국제 동향 반영한 대(對) WMD 정책수립

- (1) 한국의 대(對) WMD 정책은 기본적으로 WMD 개념 확대 등 WMD 문제관련 최근 국제동향과 핵심문제를 명확히 이해·파악하는 바탕 위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국제적 공조 및 협력의 원칙하에 한반도에서의 WMD 확산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2) 한편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화학무기협약(CWC)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한국은 비확산 규범의 강화와 보편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구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특히 북한의 비확산 규범 준수 유도를 위해서는 1990년대 후반 미국이 러시아의 핵무기 등 WMD 폐기를 위해 지원했던 「넌-루거 (Nunn-Lugar) 법안」의 제정과 같은 경제협력에 기초를 둔 「상호위

협 감소 협력」(threat reduction cooperation)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나. 일반 국민에 대한 WMD 심각성 계도

(1)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서의 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에 대한 WMD 문제의 심각성을 계도,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함.

- 최근 한 일간신문사(조선일보, 2003. 1. 1자)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약 60% 이상(특히 20-30대 젊은층)이 “북한의 핵무기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겨냥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또는 통일 될 경우 북한 핵무기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답하는 등 WMD의 심각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WMD 문제에 대한 무지(無知)와 감정적 편견으로부터 연유하고 있는 것이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무엇보다도 안보위협 수단으로서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진정한 협력 및 지원은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명확히 계도할 필요가 있음.

(2) 세계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 WMD 확산문제에 대한 균형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며, 둘째, WMD 확산이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으며, 셋째,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다. WMD 방어체제의 구축 및 강화

- (1) 한반도는 WMD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우리의 WMD 방어체제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시에 대체로 군사동맹국인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 따라, 앞으로 WMD 및 이의 파생무기에 의한 테러 및 우발적 공격가능성에 대비, 종합적인 방어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 국가안보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 WMD 및 이의 파생무기 공격에 대한 경보 및 대응책 확립은 물론 종합적인 방어체제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임.
 - 일례로 우리 국민의 방독면 보유율과 생물무기 예방을 위한 백신개발 진전도는 매우 낮아 WMD에 대한 대비체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개선이 요망됨.

2003. 1. 10

집필: 교 수 이서항

토론: 교 수 윤덕민

교 수 김태효

군축심의관 이수택

정리: 연 구 원 최현옥